

## 보도설명자료 (19. 12. 3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책연구의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써,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통에너지 대비 고용효과가 높다고 기술하고 있음

(한국경제 12.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동 연구용역\*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,
  - \*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에서 의무공급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
-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화력·원자력 등 전통에너지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
  - 따라서,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3020 이행계획 수립(18.12) 이후 신규설비가 '18~'19년간 목표의 1.7배 초과 보급되는 등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
  - 산업경쟁력 강화방안(19.4) 수립을 통해 태양광 모듈 국산비중과 셀 수출 확대,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
- ◇ 12월 31일 한국경제, <국책연구 2년 전 “태양광, 고용효과 없다” 보도에도... 정부 ‘재생에너지’ 밀어붙였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- 1 -

### 1. 보도 내용

-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’(2017년 기준 7.6%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%로 확대)이 다소 이상적이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 의견이 2년 전 정부에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
-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

### 2. 설명 내용

#### 《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관련(고용노동부, 한국노동연구원) 》

-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'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로,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의 의무공급량 조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음
- 보고서에 따르면 '30년까지 발전의무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28%(발전량 기준 20%)까지 증가할 경우 약 10만 4천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
  -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%로 유지될 경우에도 약 5만 7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
- 또한 에너지원별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할 경우,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통에너지(화력·원자력 등) 대비 2배 이상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,
  - \* 에너지원별 고용창출 계수(명/10억원)는 신재생에너지는 6.44~7.7명, 전통에너지는 2.54~3.00명으로 나타남
-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투자액 10억원당 고용효과를 비교할 경우 태양광은 6.3명으로 나타나 해상풍력(6.4명), 연료전지(6.0명), 수력(7.1명)과 큰 차이가 없음

- 2 -

\* 기사내용은 발전 설비용량(MW)당 고용계수를 비교하였으나, 정책 및 재정투입의 고용효과는 투자액 대비 고용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

-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**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**
  - 보고서의 전체 취지는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**에 있음

#### 《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(산업통상자원부) 》

-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**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**(‘17.12) 하였으며,
  - ‘18~’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**설비(7.1GW)**는 ‘17년까지 설치된 **누적설비 15.1GW의 절반(47%)**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3020의 **달성 가능성은 높음**
    - \* ‘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(1.7GW) 대비 실적 2배(3.4GW) 달성, ‘19년에도 목표(2.4GW)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(3.7GW, 전량치)이 예상
- 한편, 정부는 재생에너지 **보급목표 달성**과 재생에너지 **산업 육성**을 위해 **다양한 정책**을 추진 중에 있음
  - 특히,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**계획입지 제도**와 발전사업 허가 前 지역주민에 대한 **사전고지 제도**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,
  - 전력계통의 경우, **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** 운영, **설비보강**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적극 지원 중임
  - 한편, **태양광 발전비용은 지속 하락** 중이며, 「경쟁입찰 확대」 등을 통해 보다 **비용 효율적**이며 **시장 친화적**인 재생에너지 거래기반도 마련할 예정임
    - \*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(SMP+1REC) : ‘17년 183천원 → ‘19년 162천원

- 3 -

- **‘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(‘19.4)’**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·고품질·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**산업생태계 육성** 방안도 이행 중으로,
  - **태양광 모듈 국산비중과 셀 수출이 확대**\*\* 되었으며, 세계적 수준의 **기술력도 확보**\*하는 등 **산업경쟁력 강화 효과**도 나타나고 있음
    - \* (모듈) ‘17년 73.5% → ‘19년 78.7%, (셀) ‘17년 \$98백만 → ‘19년 \$2.25억
    - \*\* 한국화학연구원, 차세대 태양전지(페로브스카이트) 세계최고 효율(25.2%) 달성(‘19.9월)
- 정부는 **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**가 우리 **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**하고 새로운 **일자리 창출**과 **수출 산업화**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

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 / 김창검 주무관(044-203-5366)  
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장현석 과장 / 정재훈 사무관(044-202-7230)  
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소장 / 신현구 팀장(044-287-6407)

- 4 -